
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 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
25-3-6  
(서면, 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---

#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

---

2025. 1. 15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I. 추진 배경

### ☐ **美 신정부 출범, 후발국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확대**

- (美 신정부) 관세·비관세조치 구체화, IRA·반도체과학법 변경·폐지 등 주요 정책변화에 따라 대미 수출,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 우려
- (후발국 추격)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시급
- (공급망 재편)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\* 움직임이 확산되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증대

\* ①반도체·이차전지 등 전략산업, 핵심광물·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 확충,  
②핵심·전략 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및 보호체계 강화 등

### ☐ **상황 변화에 맞추어 업계 현안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신속히 추진 필요**

- (현안대응) 美 신정부 출범,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
- (경쟁력 제고) 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신산업·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 추진
  - 아울러, 전력, 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, 현장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조성

### ☐ **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개편하여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체계적 산업정책 추진**

- '24.11월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하여 업종별 동향점검, 재정·세제·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

\* '24.11월 이전 회의는 사후적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

⇒ 통상·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**민간 참여 확대, 분과 위원회 활성화** 등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

## Ⅱ.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실적

◇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'24.11월부터 반도체, AI, 항만, 석유화학, 건설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 마련

- (1차: '24.11.27) 美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주력산업 리스크 관리 방안, 반도체·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

※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·용수 인프라 구축 협약식 개최

구분	주요 논의 내용
1차 회의	· (주력산업) 반도체·이차전지·조선·철강 등 주력산업 리스크 관리방안 · (반도체)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적극 분담,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,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·용수 공급계획 구체화 등 · (AI) '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

- (2차: '24.12.11)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및 조선·항만물류·항공운송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비방안 논의

구분	주요 논의 내용
2차 회의	· (조선) 방산, MRO 등 한·미 조선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· (항만) 진해신항 구축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확보,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 조성 · (항공) 선제적 노선 신설 적극 지원, 소비자 마일리지 손해 방지

- (3차: '24.12.23)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 및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부진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

구분	주요 논의 내용
3차 회의	· (석유화학) 「기업활력법」 상 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 강화,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· (건설)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 유도, 물가보정 기준 개편 · (녹색분류) '한국형 녹색분류체계'를 개정하여 유출 지하수 활용,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 신규 추가

- (4차: '24.1.15) 관세조치 등으로 영향 받을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요인 점검, 전기차·이차전지 및 제약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

구분	주요 논의 내용
4차 회의	· (전기차·이차전지) 청년·다자녀가구 보조금 확대, 이차전지 정책금융 강화 등 · (제약바이오) 유망기술 사업화, 모험자본 공급 확대,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

### Ⅲ.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체계(안)

- ◇ **현장 의견을 반영하여**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**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**를 **민관합동 회의**로 확대 개편·운영
- 안전에 따라 기관, 경제단체,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하고, 분과위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뒷받침

#### ① 운영 및 구성 : **참석 기관장 확대 + 경제단체 등 민간 신규참여**

- ① (정부)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기관장을 유연하게 참석

\* 과거에는 부총리, 산업·고용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원장, 경제수석 등만 참석

##### 분야별 참석대상 기관장(예시)

	참석대상
산업	주력산업(산업부), 바이오(복지부), 농해수(농식품부, 해수부), 건설·물류(국토부), 환경산업(환경부), 중소·벤처기업(중기부), 금융산업(금융위), 관광·콘텐츠(문화부) 등
기능	금융지원(금융위), 경쟁정책(공정위), 산업단지(국토부), 항만(해수부), 전력(산업부), 용수·환경규제(환경부), R&D(과기정통부), 노동(고용부) 등

- ② (민간)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, 업종별 협단체, 전문연구원이 탄력적으로 참여

\* 과거에는 주로 정부 기관장들만 참석하고 민간은 예외적으로 참석

##### 분야별 참석대상 민간기관(예시)

	참석대상
경제단체	대한상의, 경총, 한경협, 중기중앙회, 중견련, 무역협회
연구원	산업연구원 및 안전 관련 연구원(자동차연구원 등)
협단체	업종별 협단체(반도체협회, 자동차협회, 조선협회 등)
공공기관	안전 관련 공공기관(금융감독원, 산단·LH·수공·한전 등)

※ 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「**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**」(대통령 훈령)을 **1월 중 개정** 예정 (☞ 참고 : 규정 개정안)

## ②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: **킵오프 회의**(1~2월) + 과제발굴 지속

- **(구성)** 기술, 산업,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·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각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
- **(운영)** 생생한 시장동향, 애로사항, 정책제안 등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킵오프 회의(1~2월)를 개최
  -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·논의하고, 향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 안전에 반영

분과	기능 및 구성안
① 총괄분과 <small>기재부 1차관</small>	·(기능) 투자익스프레스를 통해 현장애로 청취 및 차관급 현안조정 회의를 통해 분과위 등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 협의·조정 ·(구성) 기재부 1차관 및 관계부처 차관
② 기술분과 <small>과기부 1차관</small>	·(기능)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 논의 ·(구성) 반도체·이차전지·AI·양자 등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
③ 산업분과 <small>산업부 1차관</small>	·(기능) 산업별 지원방안,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등 산업대책 논의 ·(구성)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민간기업
④ 혁신분과 <small>중기부 차관</small>	·(기능) 오픈이노베이션, 벤처·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논의 ·(구성) 창업진흥원, 한국벤처투자, 벤처협회 등 유관 민간기관 참여
⑤ 기반시설분과 <small>국토부 1차관</small>	·(기능) 입지·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 논의 ·(구성) 한국전력, 수공, LH 등 유관기관 참여

※ 현안기업 구조조정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분과 운영(금융위 부위원장 주재)

## IV. 향후 계획

- ☐ 2월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시 경제단체, 업종별 협단체·전문연구원 등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
- ☐ 수시 개최하여 美 신정부 출범(1.20) 이후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논의

## 참고

##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(대통령 훈령 개정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·추진을 협의하고,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기업·산업별 동향 점검과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기업·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
3. 재정·금융·세제·규제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
4.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부처의 장 등이 제출하는 산업경쟁력 관련 안건 및 보고사항

### ※ 기존 규정

1.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2.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3.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의 종류)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제5조(회의의 구성) 회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, 심의·조정 대상 안건 관련 기관의 장,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.

### ※ 기존 규정

제5조(회의의 구성)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
2.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3.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안건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회의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사람

제6조(회의의 운영) ① 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.

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⑥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의안제출) ①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고사항
2. 의결사항

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0조(간사)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.

제11조(분과회의) ① 의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